

한국사회 자살 통계에 대한 장기 추세 분석: 『경찰통계연보』 1953년~2015년 자살통계를 중심으로

정승화

이 연구는 유신체제 이후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통해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자살원인과 자살수단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살률, 자살 통계, 공식 통계, 경찰통계연보, 개발독재시기, 코호트 효과

정승화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shjoung@gmail.com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518). 이 논문의 일부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정승화, 2012a) 3장 1절 “경찰청 자살 통계(1953년~2010년)” 분석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는 2003년부터 13년째 연속으로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¹⁾ 자살률의 격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최근의 자살률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이 급증했던 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심지어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의 영향 하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보다 더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동을 보여주는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없어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일반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²⁾

한국사회에서 자살 통계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행정의 일환으로 조사된 이래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축적되었다. 식민지시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자살 통계가 실려 있고 해방이후에는 『경찰통계연보』에 자살 통계가 작성되었다. 통계청이 신설된 1983년 이후에는 통계청에서 자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통계에 대한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자살 통계와 관련한 분석이나 자살 경향의 역사적 추이를 진단할 때에는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 변화를 기초로 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하

1) 조선일보 2017년 5월 19일 「농약 판매 제한했다... 한국 자살률 4위로 떨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9/2017051900137.html>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이호영·신승철 교수팀이 1965년부터 1988년까지 치안본부가 집계한 자살기록을 토대로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자살률의 추이”란 논문을 발표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한겨레신문 1989년 10월 8일). 이 연구를 통해 1960~70년대 자살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이후의 자살 통계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1990년 신경정신의학 저널에 “한국인의 자살(1965~1988)”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는데, 참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살 통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없다는 점은 자살 연구를 빈곤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한국사회의 자살률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기 시계열적인 분석의 결여는 과거 시기와의 연속성 속에서 최근의 자살률 의미를 분석하는 장기적인 분석적 안목을 갖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전 시기와 대조하여 무엇이 새롭게 나타난 경향이고 한국사회 자살률의 역사적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은 한국사회 자살 통계 연구의 분석적 시각을 협소하게 만들고 때로 잘못된 진단이나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자살 통계 연구는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청의 자살 통계를 자료로 하고 있기에 1983년도 이후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통계연보』를 이용한 자살 통계 분석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학문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이다.³⁾

『경찰통계연보』가 그동안 자살 통계 연구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로는 박정희 시기의 국가기록물에 관한 통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찰통계연보』는 1954년에 발간되기 시작하여 1953년도 자살 통계부터 매년 자살 통계가 작성되었고 현재에도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1969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통계연보』는 경찰청과 경찰대학 내부 도서관에 대외비 문서로만 존재하였다. 비밀문서가 해제된 이후에도 경찰 내부의 자료로 보관되어 있어서 통계자료 자체

3)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원순(1990)이 1960년부터 1989년까지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석사논문으로 분석하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연구팀인 신승철·이호영·이은설(1990)이 1965년에서 1988년까지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분석하였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간호전공인 김부연(1997)은 1964년에서 1995년까지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분석한 석사논문을 작성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박형민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분석』의 자살 통계를 통계청 자살 통계와 비교분석하였다(박형민, 2010). 『범죄분석』의 자살 통계는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의 존재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 사회과학적 연구의 역사적 자료로서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 이후 통계청이 신설되어 자살통계를 발표하고 난 이후의 자살 통계만이 자살 통계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그 이전 시기나 경찰청 통계와 통계청 통계와의 비교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공식 통계로서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조사하여 수집하는 경찰청 자살 통계와 유족의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계청 자살 통계는 2008년 이전까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유족들이 사망원인을 신고할 때 자살로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자살 사망자가 통계에서 누락되었다.⁴⁾

통계청 자살 통계로 자살률 변동을 살펴보면, IMF경제위기 위기 이후 급증했던 자살률은 2000년대 초반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의 급격한 변동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자살률의 급변을 설명을 요하는 문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살률 변동을 연구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신용대란의 문제를 지적하거나(노용환, 2004) 실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지적하였다(은기수, 2005). 또한 1990년대 이래 자살률 급증 현상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반박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로 파악하기도 하였다(신동준, 2012: 87).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 통계청 자살 통계의 2000년대 초반 자살률 급증의 숨겨진 요인 중에는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련된 행정적 변화가 일부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경찰청의 통계 불일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어서 자살에 관한 공식 통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⁵⁾ 통계청에서는 2007년 이전까지의 자살 통계에 누

4) 박형민은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사망원인 통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경찰청의 자살 통계가 상대적으로 더 타당한 자료임을 주장하였다(박형민, 2010: 29-32).

락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 자살 통계를 수정하고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이후 통계청 통계에서 나타나는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는 자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상의 노력이 자살 통계 산출 과정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자살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살 통계를 자살에 관한 문화적 의미가 각인된 자료로 파악하는 더글라스(Douglas, 1967)에 따르면, 자살에 관한 공식 통계는 '객관적인' 사실의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의미작용을 통해 수집되고 분류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료이다. 자살 통계의 해석과 분석에서 통계 자료의 생산이라는 점은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더글라스의 관점에 기반하여 자살 통계의 생산 과정이 통계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자살 통계가 생산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살 통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경찰통계연보』를 통해 1950년대 이래 한국사회의 자살 통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자살률의 추세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경찰의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자살 통계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1953년부터 2015년까지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장기적인 시계열적 변화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고 자살원인과 자살수단별 자살자수의 변화, 그리고 자살에 대한 분류체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와 통계청 자살 통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2007년 이전의 자살 통계 연구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공식 자살 통계의 하나인 『경찰통계연보』 자살 통계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5) 2004년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에서도 경찰청과 통계청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보건복지부, 2004).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자살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뒤르켐(Durkheim)과 실증주의자들의 통계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더글라스와 현상학자들의 접근법이다(Taylor, 1982: 8). 뒤르켐은 자살 연구를 통해 사회의 법칙들을 밝혀내는 실증적 지식으로써 사회학을 확립하려고 했다.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으로 결정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사실’로 인식하였고,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 규제와 통합의 틀로 파악하였다(Durkheim, 1897). 뒤르켐의 이론을 보다 심화시킨 깁스와 마틴(Gibbs & Martin, 1964)은 뒤르켐의 사회통합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역할갈등” 개념을 통해 사회의 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들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위통합의 정도를 척도로 계산하여 자살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브리드(Breed, 1963)는 경제적 위신의 상실과 자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뒤르켐의 사회통합 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유럽과 미국 등에 분석을 적용하여 시골-도시 거주, 혼인 상태, 성별, 인종, 직업 등의 변수와 자살률을 비교분석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 기술의 효율성과 직업적 구조 등의 요인을 자살률과 연관시켜 검토하는 연구도 있었다. 뒤르켐의 이론적 틀을 확장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변수로 삼아 자살률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이어졌는데, 테일러(Taylor, 1982)는 이러한 연구를 일컬어 “자살률의 사회적 요인 연구”로 명명하였다(Taylor, 1982: 23).

한편 자살에 관한 사회적 의미가 자살 통계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글라스는 자살 통계 작성에 개입하는 문화적 측면과 행위자들의 주관성 때문에 통계의 객관성을 의문시한다. 그는

공식 자살 통계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자살의 사회적 의미와 맥락이 차이가 있기에 자살 통계는 근본적으로 통계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Douglas, 1967: 178-182).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자살 통계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적 분석보다는 자살이 규정되고 분류되는 방식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살의 문화적 의미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살 통계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자살률의 변동이나, 자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와 자살률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하는 “자살률의 사회적 요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박경애, 1996; 박종순·이준영·김순덕, 2003; 노용환, 2004; 은기수, 2005; 오진경·조영태·김창엽, 2005; 유경원·노용환, 2007; 신동준, 2012).

뒤르켐의 사회통합이론과 깁스와 마틴의 지위통합이론을 보충하여 박경애는 성역할 가설을 바탕으로 결혼과 자살의 관련성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박경애, 1996).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2000년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상태를 분석한 오진경·조영태·김창엽의 연구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고 직업별로는 농수산업이 가장 높았고 이혼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자살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오진경 외, 200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팀의 연구진들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박종순 외, 200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살률과 실업률,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지표로 사용한 자기회귀모형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자살률은 경제성장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실업률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와 자살이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경제학 분야에서도 한국사회 자살의 원인을 경제 이론 및 실증에 기

반하여 분석한 연구가 시도되었다(노용환, 2004). 노용환은 평생기대효용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개인이 왜 자신의 소득수준과 현재의 연령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가를 광역시와 도의 1990년에서 2004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살률의 증가 요인이 실업 등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높은 인구고령화와 도시화에 기인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노용환은 실업률과 자살률이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실업이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실업을 탈피하기 위한 고된 노동과 직업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을 촉발하는 요인이며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가족의 결속력을 강하게 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노용환, 2004: 195-196).

실업이 가족의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노용환의 주장은 실업률과 자살률의 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실업이 증가하였는데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뒤르켐의 사회통합가설을 역으로 적용하여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가족유대의 증가로 해석하였다. 노용환의 연구에서 실업률과 자살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업률은 1998년 급등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자살률은 1998년 급증 이후 잠시 감소하다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직은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으로 생각된다.⁶⁾

6) 노용환은 자살률과 실업률의 음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실업률이 증가할 때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였지만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업률과 자살률의 음의 상관관계는 급격한 경제침체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더라도 자살률은 이후에 시차를 가지고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자살은 계속되는 구직의 실패와 경제난의 증가 속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누적된 절망과 고통으로 인한 선택일 수 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년 미만의 실직자는 27.3%인데 비해 1년 이상의 실직자는 51.3%였다(이훈구·이혜주, 1998: 808-809).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의 증가를 경제적 양극화의 시각에서 분석한 은기수의 연구는 경제위기 전과 후인 1990년부터 1997년까지와 1998년부터 2004년 시기로 나누어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분배, 가계부실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전체자살률, 고령 자살률, 각 연령 자살률과의 관계를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 비교분석하였다. 은기수는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은 자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경제적 양극화가 자살률의 급증과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은기수, 2005).

송재룡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과 관련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요인들을 자살 충동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IMF경제위기와 자살률의 상승을 연결 짓는 것은 2003년 이후 다시 급속하게 상승한 자살률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송재룡, 2008). 신동준도 2000년대 초반의 자살률 증가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자살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일반적 인식을 반박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로 생각하였다(신동준, 2012: 87). 그는 외환위기가 닥친 직후인 1998년에 자살률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해에 자살률이 크게 떨어졌고 자살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자살률이 급증한 시점은 2002~2003년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제도의 약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⁷⁾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2002년 이후 통계청의 자살 통계 자료의 수정 보완 과정에서 증가한 자살률의 상승폭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것이다. 경찰자살통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⁸⁾

7) 신동준의 연구는 1985년에서 2010년의 OECD Health data에 기초한 분석인데 이는 통계청의 자살 통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 자살 통계를 통해 자살 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1998년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 자살률 추세의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다.

8) 2000년대 초반 자살률 증가는 사회경제적 원인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계청 자살 통계만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자살률 변동의 변화의 폭에 관한

최근 자살에 관한 통계적 연구는 노인과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다. 특히 노인자살률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관련하여 노인 자살이 연구되고 있다(김형수·권이경, 2013). 고령화라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령코호트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송태민 외, 2013; 이지연·김소현, 2010). 통계청 소속의 이지연·김소현은 인구규모가 큰 코호트는 인구규모가 작은 코호트에 비해 자원희소성과 경쟁의 심화,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삶의 질의 저하를 경험한다는 ‘이스털린 효과(Easterlin effect)’에 주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높은 자살률을 설명하는 연구를 내놓았다(이지연·김소현, 2010).

최근에는 지역별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심에서 지역별 자살률의 차이에 주목하거나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공동체적 자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김민영, 2013; 이민아·강정환, 2014).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에서 발간한 『경찰통계연보』를 이용하여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 통계의 역사적 변화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경찰통계연보』는 일부 자료가 국회도서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만 결호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살률은 단순한 인구비율로 계산하는 보통자살률⁹⁾ 또는 조자살률¹⁰⁾과 성별과 연령 구조의 격차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자살률이 사

과대 해석의 위험이 있다. 특히 통계 자료의 산출과정이 변화되는 시기였기에 자살 통계 수집의 행정적 체계의 변화가 자살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통계 수치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9) 지용호·조해인은 해당연도에 보고된 자살자수를 해당연도의 추계된 인구수로 나눈 후 10만 명 당 자살자 수로 표시한 자살률을 보통자살률로 정의하였다(지용호·조해인, 2014: 134).

용된다. 보통자살률은 해당연도에 보고된 자살자수를 해당연도의 추계된 인구수로 나눈 후 10만 명 당 자살자 수로 표시한 자살률이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살 통계는 연령표준화자살률이다. 연령표준화자살률은 성별 연령별 표준인구를 5세 단위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합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인구수를 표준인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연초와 연말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보통자살률은 연령에 따른 인구 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료가 제한적인 역사적 자료와 집계표 형태로 기록이 남아 있는 자살 통계는 대체로 보통자살률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보통자살률은 계산이 단순하고 역사적 추이이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 장기시계열적인 자살률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 자료는 변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이 타살이 아닌지 수사를 통해 자살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신고하는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계청 사망통계보다 정확한 자살자수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식민지시기 자살 통계 역시 변사자에 대한 경찰조사를 통한 업무통계의 형태로 구성된 통계이어서 자살 통계가 생산된 방식의 통일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사회의 20세기 자살 통계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청 통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자료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과거와의 비교, 국가 간 비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살률을 추계인구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보통자살률로 계산하였다.¹¹⁾ 1950년대 인구는 대한민국통계연감의 인구수를 참조하

10) 김민영은 추계인구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자살률을 가리켜 조자살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김민영, 2013: 313).

11) 계산 방식의 차이, 연령별 인구구조의 특성을 보정하는 방식의 연령표준화 자살률 계산법 등이 있어서 발표되는 공식 자살률과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통자

였고 1960년대 이후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를 사용하였다. 연령별 자살률은 『경찰통계연보』의 연령별 자살자수를 토대로 계산하였는데 연령 구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¹²⁾

경찰의 업무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집계되는 『경찰통계연보』는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점검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뢰성과 관련해서 점검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¹³⁾ 『경찰통계연보』는 수작업을 통한 기록물 형태의 집계표로 자살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살원인별 자살자수나 자살수단별 자살자수 등의 기록 등에서 산술적인 합이 일치하지 않는 세부적인 오류가 존재하고 범주 분류상의 오류와 범주 혼동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류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더불어 자살원인이나 수단의 분류 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의 함의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살률은 미세하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2) 10대의 경우 10세에서 20세를 구간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통계청 장래추계인구는 5세를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10세 미만, 10대는 10세~19세, 20대는 20세~29세, 30대는 30세~39세, 40대는 40세~49세, 50대는 50세~59세, 60대 이상은 60세 이상으로 작성되는데 비해, 『경찰통계연보』의 연령구간은 10세미만, 10세~20세, 21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10대의 자살자수는 연령구간 열한 개가 포함되므로 원래의 10대 자살률보다는 더 높게 계산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연령별 인구수와 연령구간이 한 구간씩 차이 나게 계산된 수치여서 엄밀하게 계산되지는 않은 자살률임을 밝혀둔다. 하지만 1세 구간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고 소수점 1에서 반올림한 자살률이기에 시계열적인 연령별 자살률의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3) 여기에 경찰 통계의 오류가 잘못 인용되는 사례 등이 언론에 보고되면서 경찰 통계의 신뢰 확보를 위한 통계관리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범죄통계와 경찰에서 생산하는 경찰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되었다(권세혁·탁중연, 2008). 그리고 경찰의 통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 『경찰통계연보』의 통계작성 절차와 관련된 자료의 입력과정에서의 인적인 오류와 누락, 기준이나 합계 등이 불일치하는 통계, 분류의 세분화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박중승,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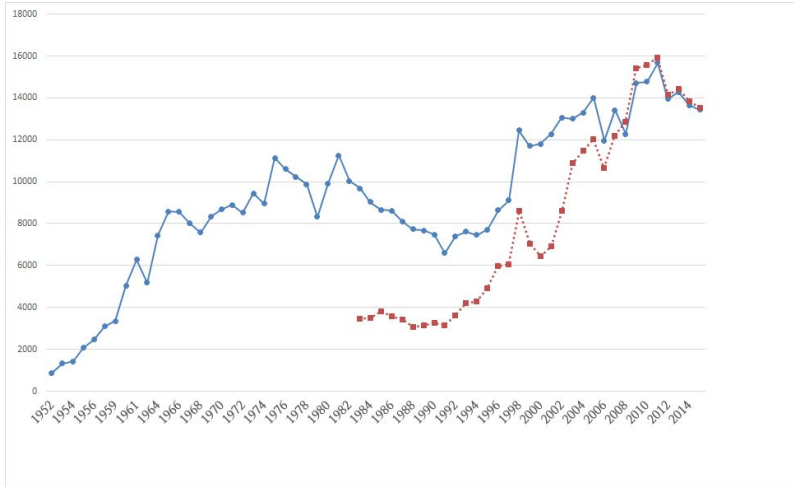
3. 경찰청 자살 통계와 통계청 자살 통계의 비교

한국사회의 공식적인 자살 통계로는 유족의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계청 자살 통계와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조사하여 수집하는 경찰청 자살 통계가 있다. 그런데 2008년 이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살 통계와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자살 통계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유족들이 가족원의 자살을 드러내기 꺼려서 자살로 신고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로만 한국사회의 자살률의 변동을 파악할 경우 특히 1980년대의 경향을 잘못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통계의 자살자수는 1980년대 꾸준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이와는 정반대로 1980년대 초 매우 낮은 수준이다가 중반까지 서서히 증가하고 이후 조금 감소하는 양상의 그래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 이전까지의 자살자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계청 자살자수의 변화 그래프만 가지고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자살을 추측한다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개발독재 시기의 높은 자살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의 통계 불일치로 인해 통계청 자살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자살에 관한 공식 통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2004년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에서도 경찰청과 통계청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보건복지부, 2004).

최근 통계청에서는 공식 통계를 다시 발표하여 2007년도 이전에 발표된 통계청 자살 통계와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최근 통계의 일관성 확보와 국제비교 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난 24년간(1983년 ~ 2007년)의 자료원 및 집계방식의 단일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를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가) 1958년, 1962년, 1963년 통계는 누락되었음.

<그림 1> 경찰청 자살 통계와 통계청 자살 통계 비교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2009: 27). 그리고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신고서에 누락된 통계를 보완하여 통계를 재작성하여 발표하였다.¹⁴⁾

1980년대 초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사망원인 통계로 자살률을 계산한 심영희는 통계청 통계를 보정하여 의사진단자료의 총사망자수대 자살자의 비율을 총보고된 사망신고로 확대시켜 계산하였다(심영희, 1986). 사망원인이 자살로 분류된 자료를 전체사망신고수로 확대시켜 계산하면 자살률은 1981년 9.39, 1982년 10.32, 1983년 8.60이었는데, 심영희는 의사진단데이터의 자살자수를 의사진단 사망자

14) “신고누락이 많은 영아사망은 화장신고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1999년)”하고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부 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200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2002년), 국방부, 해경(2008년) 등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인을 보완”하고 있다고 한다(통계청, 2009: 47).

수대비 보고된 사망자의 비율을 곱하여 총인구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즉, 자살률={의사진단데이터의 자살자수*(보고된 사망자수 전체/의사진단데이터의 사망자수)}/총인구(심영희, 1986: 61). 이렇게 해서 계산된 자살률은 1980년 22.62, 1981년 20.76, 1982년 22.00, 1983년 19.98이었다. 이 값은 경찰청통계로 계산한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인 1980년의 26, 1981년의 29, 1982년의 25.5, 1983년의 24.3과 비슷한 수치로 통계청 통계보다 경찰통계연보의 자살률에 훨씬 근사치인 값이었다.

임종필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서울시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자 중 자살 사망자를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통계청 사망 원인의 분류와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자살사망자에 대하여 진단서 및 검안서의 종류 및 통계청의 사망종류와 비교하여 일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사망통계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570명의 연구 대상자 중 통계청 사망 분류에서 자살로 분류된 경우는 2000년 58.7%, 2001년 65.9%, 2002년 89.1%, 2003년 94.9%, 2004년 94.4%였다(임종필, 2006). 임종필의 연구는 2002년 이후 통계청 통계에서 나타나는 자살의 급격한 증가는 이전에 사망신고가 부실하게 신고되어 자살 통계로 잡히지 않던 자살자가 행정기관들의 상호 정보 공유로 인해 통계 작성의 정확성이 상승한 결과임을 뒷받침한다.

2003년부터 통계청에서는 경찰청의 협조로 전년도의 변사자 통계를 넘겨받아 경찰청 통계와의 주민등록 대조를 통해 누락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망원인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가천의과대학교, 2008). 2008년 이후 통계청 사망원인에 나타난 자살자수는 『경찰통계연보』의 자살자수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 통계와 통계청 통계의 격차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공공 통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경찰통계연보』의 통계관

리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종승, 2014). 통계 작성과 관리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지만 자살률의 시계열적인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경찰청 통계 자료가 공식 통계로서 유의미하다. 또한 1980년대에서 2007년까지의 자살 통계도 통계청 통계보다는 경찰청 통계가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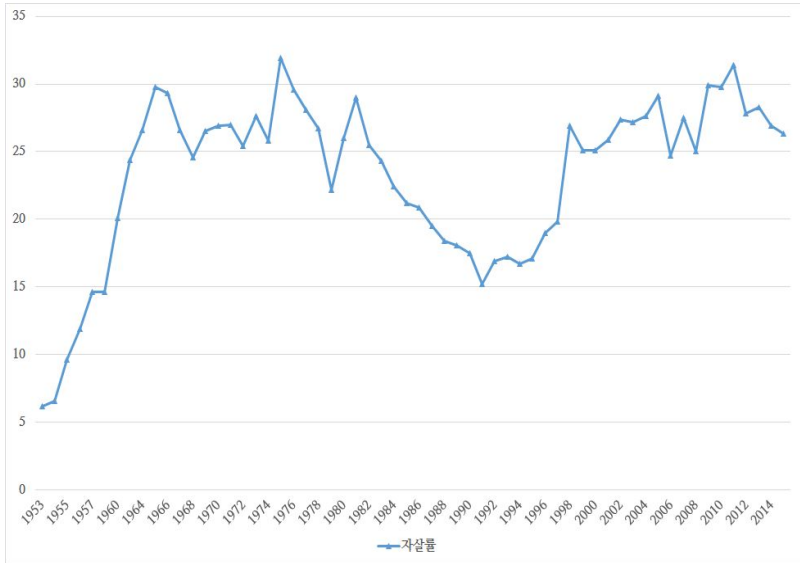
4. 경찰청 자살통계 (1953년~2015년) 분석

1)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한국사회 자살률의 장기 시계열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2>의 그래프는 1년 동안 발생한 자살자수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인 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증가한 상태 속에서 약간의 변화의 폭을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하고 다시 새로운 동인에 의해 증가하면 일정기간 높은 자살률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50년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한 자살자수는 1960년에 5,033명으로 처음 오천 명을 넘어서게 된다.¹⁵⁾ 1965년에는 8,558명을 기록하며 자살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65년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당 29.8명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남성 자살률은 41.1명으

15) 1950년대 자살률 통계는 전시상황에서 수집된 정보라는 한계로 인해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마비된 행정체제는 1950년대 말까지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통계연보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1950년대에 자살률이 낮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969년 경찰통계연보의 자살자수 통계를 분석한 이장현도 1950년대 자살자수가 비교적 적은 것에 대해 “그때의 社會經濟的(사회경제적) 또는 思想的(사상적) 道德的(도덕적)인 與件(여건)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자살에 관한 當局(당국)의 자료수집의 不完全性(불완전성)을 말해주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이장현, 1969: 104). 신문기사에 자살에 관한 기사가 매우 많이 보도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1950년대 자살률은 『경찰통계연보』에 기록된 수치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 1958년, 1962년, 1963년 자살자수는 『경찰통계연보』에 자료가 없음.

<그림 2> 자살률의 시계열 변화 (1953년~2015년)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67년부터 조금 감소하기 시작한 자살자수는 1968년에는 7,574명으로 줄어들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한 특수경기의 호황기를 맞이하였고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유신과 함께 긴급조치가 취해지고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겪으며 자살자수는 다시 급증하였다. 1973년 자살자수는 9,417명으로 처음으로 구천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975년에 11,243명으로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서는 자살자수를 기록하였다. 1975년 자살률은 31.9명으로 『경찰통계연보』를 통해 계산한 자살률로는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1971년부터~1977년까지 GNP는 평균 9% 이상 증가하고 실업률이 저조하게 유지되었지만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도 높아서 서민들의 삶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또한 긴급조치와 위수령을 비롯한 정치적 억압이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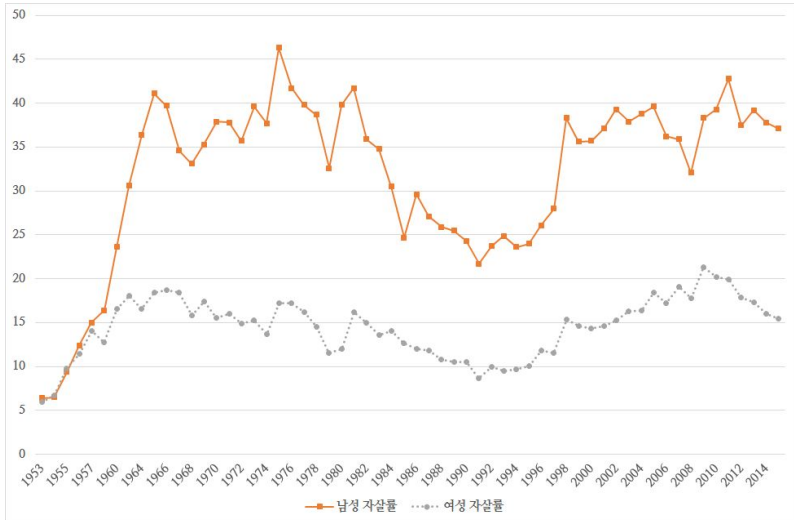
1979년에 자살률은 급속히 낮아졌지만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난 직후인 198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1982년 이후 자살률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률은 1980년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고 1991년 15.2로 낮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1970~80년대의 자살률 경향은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였다. 정치적 억압과 혼란의 상황이 자살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승철 교수의 연구팀도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실업률의 감소 현상만으로는 자살률의 변화를 단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신승철 외, 1990: 928). 이들은 197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1980년대 후반까지 자살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분석하면서 정치 사회나 경제적 상태의 변화 이외에 “자살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기독교 인구수의 폭발적 증가,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 요구충족 방법의 다양화 및 증가, 그리고 민주화에 따른 공격적 감정 표출의 방도가 보다 향상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신승철 외, 1990: 929).

1997년의 IMF경제위기의 여파로 1998년에 자살률은 26.9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1999년과 2000년 소폭 감소하여 25.1을 기록하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여 27.4을 기록하였다. 2005년 29.1을 기록하던 자살률은 2008년 25.2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30.2로 다시 치솟았다.

1950년대 성별 자살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남녀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10명 내외로 거의 비슷하였다가 1960년에는 2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남성자살률은 23.6명이고 여성자살률은 16.6명에 이르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 남성과 여성 자살자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으나 이후에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남성 자살자가 여성 자살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64년 남성 자살자수는 5,122명이고 여성 자살자수는 2,309명으로 남성 자살자수가 여



가) 1958년, 1962년, 1963년 자살자수는 『경찰통계연보』에 자료가 없음.

<그림 3> 성별 자살률 시계열 변화 (1953년~2015년)

성 자살자수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여성 자살자수는 남성에 비해 변화의 폭이 적고 일정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 자살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여성에 비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의 경향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자살률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자살률이 함께 증가하고 감소하는 시기에는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위기나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시기에 자살률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1962년 경 세계 각국의 자살률 통계를 보면 헝가리가 인구 십만 명당 24.9명으로 가장 높았다(Palmer, 1972: 105). 한국은 1961년 24.4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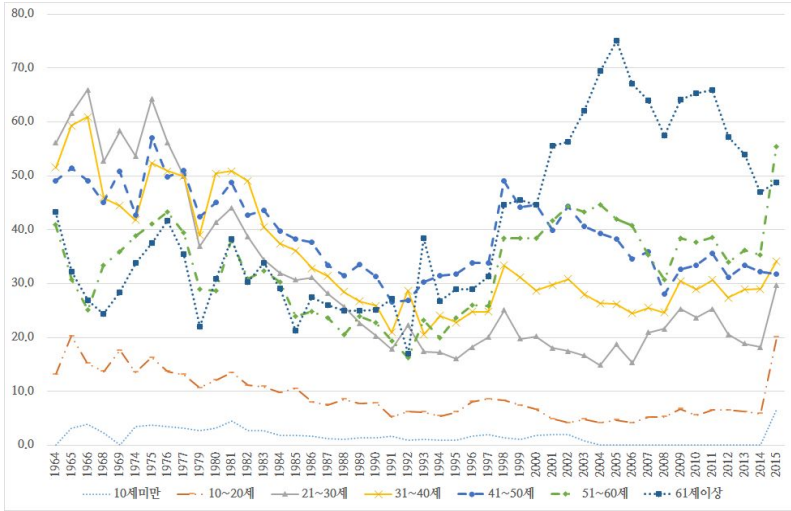
당시 세계 최고인 헝가리와 비슷한 수준의 자살률을 보였다.¹⁶⁾ 1960~70년대 1963년과 1979년을 제외하고 거의 내내 25명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특히 1975년에는 31.9명이라는 기록적인 자살률을 나타냈다.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 한국사회는 자살률이 매우 높았고 자살률의 변동이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구와 북미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살률이 일정하고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자살률은 최근 60년간 인구 십만 명당 10~13명 사이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는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여 1955년에는 25.1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자살률이 하락하여 인구 십만 명당 15~20명 수준이다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다시 급증하는 양상이었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자살률은 변화의 폭이 크고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자살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1966년에 20대 자살률은 65.9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1975년에도 20대의 자살률은 64.2명으로 매우 높았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20대 자살률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1995년도에는 평균 자살률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20.0 전후로 비교적 높은 자살률이지만 평균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1960~70년대에는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5년에 61세 이상의 자살률은 75.1 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 자살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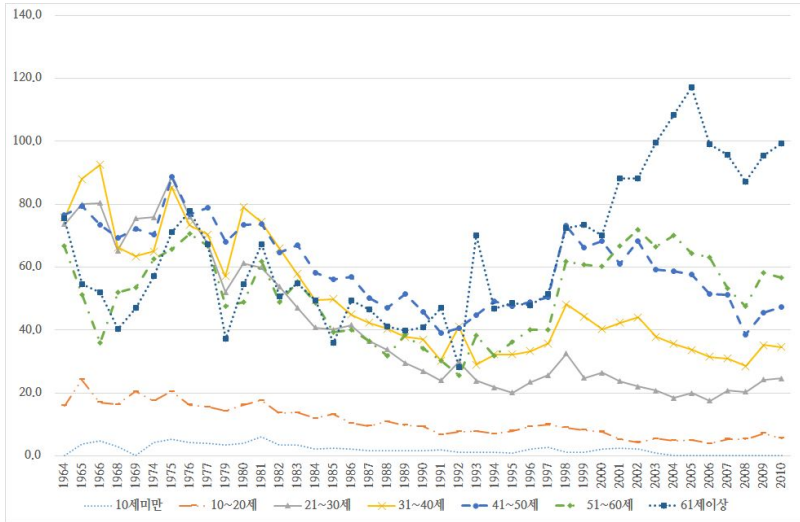
16) 이도암이 인용한 國連 Demographic Yearbook, 1961, 1961년도판 한국의 1961년도 총자살자수는 7,263명으로 자살률은 27.2명으로 계산하여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이도암, 1965: 96).경찰청통계연보의 1961년도 자살자수는 6,287명으로 나와 있다.



가) 1964년 이후 연령별 자살자수가 제공되고 있는데, 1967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8년은 『경찰통계연보』에 연령별 자살자수 자료가 없음.
 <그림 4> 연령별 자살률 시계열 변화 (1964년~2015년)

연령별 자살률의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그 특징은 보다 두드러진다. 남성은 1960~70년대 20대, 30대, 40대가 거의 유사하게 인구 십만 명 당 80명이상이라는 초고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었다. 1960~70년 20대 남성 자살률이 이처럼 높았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61세 이상 남성 자살률은 1990년대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무려 117.2라는 기록적인 자살률을 나타냈다.

1970년대 중반이후 20대 남성 자살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5년 이후에는 평균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1960년대 20대, 1970년대 30대, 1980년대 40대, 1990년대 50대, 2000년대 61세 이상의 남성 자살률은 시계열적으로 계속해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의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삶의 갈등이나 문제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60년대에 20대였



- 가) 1964년 이후 연령별 자살자수가 제공되고 있는데, 1967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8년은 『경찰통계연보』에 연령별 자살자수 자료가 없음.
 - 나) 2011년 이후는 『경찰통계연보』의 연령별 자살자수 자료에 성별 집계표가 없음
- <그림 5> 연령별 남성 자살률 시계열 변화 (1964년~2010년)

던 4·19세대가 계속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래프의 패턴은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에서 연령코호트 요인의 문제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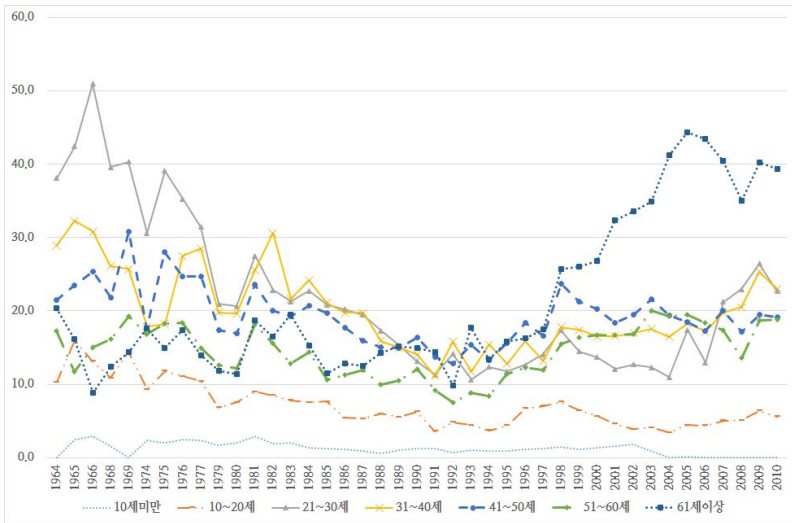
1950년대 이래 현재까지 서구의 국가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¹⁷⁾ 일본의 경우에도 1960년대 20대 자살률이 40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과 비교해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나라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이 타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였던 점은 개발시기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

17) 1950년에서 1995년까지 14개의 서구 국가를 대상으로 15~19세와 50~54세 그룹의 평균자살률을 비교하여 자살의 연령효과를 검토한 오브라이언은 14개 국가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하였다(O'Brien, 200; 이지연 · 김소현, 2010: 69에서 재인용).

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자살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4·19세대의 높은 자살률이라는 연령코호트 요인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스털린효과(Easterlin effect)에 주목하여 연령코호트에 따른 자살률을 분석한 이지연과 김소현은 1938~1947년생 출생자들이 고령층에 도달하는 시기인 2008~2011년까지 자살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이지연·김소현, 2010). 자살위험에 대한 연령코호트효과는 전 생애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의 연령별 자살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1960~70년대에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1966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 당 51.0명으로 한국 근대 역사상 여성 자살률로



- 가) 1964년 이후 연령별 자살자수가 제공되고 있는데, 1967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8년은 『경찰통계연보』에 연령별 자살자수 자료가 없음.
- 나) 2011년 이후는 『경찰통계연보』의 연령별 자살자수 자료에 성별 집계표가 없음.

<그림 6> 연령별 여성 자살률의 시계열 변화 (1964년~2010년)

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성 자살률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자살률 상승의 경향과 함께 20대 여성자살률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이후에는 평균 여성 자살률을 상회하는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30대 여성의 자살률도 1965년 32.3로 매우 높았다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고 1982년 30.6으로 상승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40대 여성의 자살률은 1970년대에 높은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접어들면서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2000년대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10대 여성의 자살률은 1960년대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1세 이상의 여성 자살률은 1980년대까지 타연령대에 비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가 1985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5년 인구 십만 명 당 44.3명으로 최고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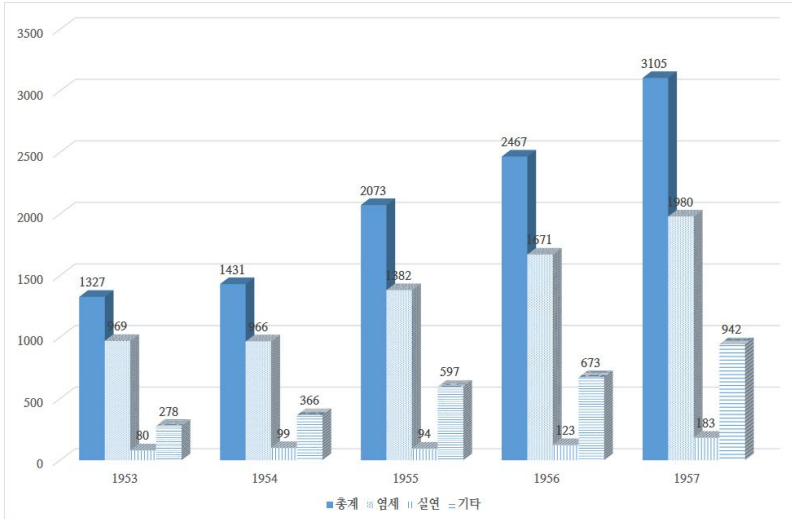
IMF 경제위기 이후의 20대 여성 자살률과 30대 여성 자살률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61세 이상의 여성 자살률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연령코호트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 시기와 대학 시절에 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지금의 20대와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살원인의 시계열적 변화

1950년대 자살통계는 자살의 원인을 염세, 실연, 기타 세 가지로만 분류하였다. 식민지 시기 자살원인의 분류가 이십 여 가지 이상이었음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세 가지로만 자살 원인을 분류했다는 점은 1950년대 통계조사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음을 반증한다.¹⁸⁾

18) 초기 자살 통계를 담당하던 사람의 임의적인 분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연을 염세와 함께 가장 주요한 자살 원인의 분류항목으로 꼽았던 점이 흥미롭다. 1950년대에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자살 기사가 많았던 점도 이러한 분류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55년 전체 자살자수 2,073명 중 염세 자살로 분류된 경우는 1,382명인 66.7%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였고, 실연은 94명 4.5%였다. 기타는 597명으로 28.8%에 달했다. 1955년 자살자수는 2,000명을 넘어 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는 5000명을 넘어설 정도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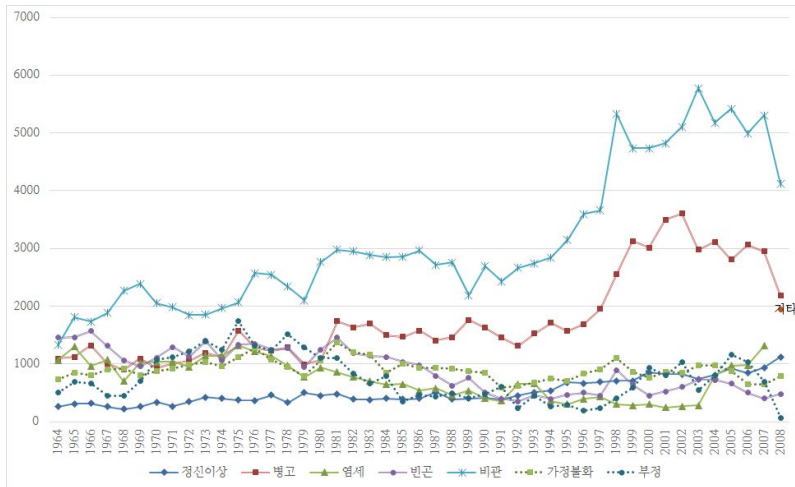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7> 1950년대 자살원인별 자살자수 (1953년~1957년)

1953년에서 1957년까지는 염세, 실연, 기타의 세 가지였던 자살원인 분류는 1964년부터 정신이상, 병고, 염세, 빈곤, 비관, 낙망, 치정, 실연, 가장불화, 사업실패, 부정의 열 한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1964년부터 2007년까지 44년 동안 이러한 자살 원인의 분류 범주는 변하지 않았다. 2008년에 염세와 비관 항목이 합쳐져 염세비관으로 변경되었고 기타항목이 추가되어 11개 항목으로 재조정되었다. 2009년부터 자살원인이 국제 손상외인분류체계에 따라 가정문제, 경제생활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육체적 질병문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 기타, 미상의 열 개 분류 항목으로 변경되었다.¹⁹⁾

이 논문에서는 2008년까지를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분류체제로 간주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이전 년도와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2008년도의 염세비관 자살분류를 비관자살로 분류하였고 2008년도의 그래프에만 기타 항목을 표시하였다. 2009년부터 2015년의 자살원인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원인 분류별로는 비관 자살이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증가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3년 5,772명으로 최고로 높은 자살자수를 보였다. 2008년 비관 자살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타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자살원인으로 1,945명이나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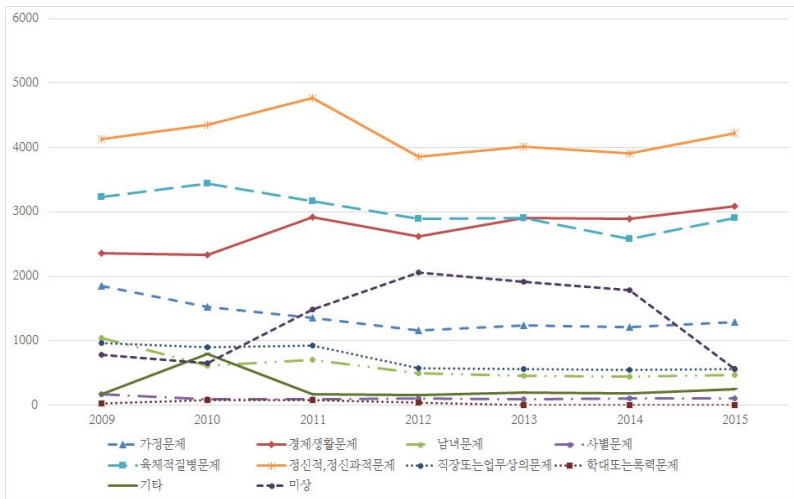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8> 주요 자살원인별 자살자수 시계열 변화 (1964년~2008년)

자살원인별 분류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에는 비관자살이 전체 자살자의 2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빈곤이 17.1%였다. 전체 자살 중 비관으로 분류된 자살자수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

19) 2009년도판 230쪽 각주4번에 “자살원인을 2009년부터 국제손상외인분류체제에 따라 변경됨”으로 기술되어 있다.

는 전체 자살자의 40.9%가 비관 자살로 분류되었다가 이후 감소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에 의한 자살로 분류된 비율은 196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0%를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다가 1990년에는 6.7%로 매우 낮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염세로 분류된 자살도 1965년에는 15.2%로 높았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2.6%까지 낮게 분류되었다. 이는 1960년대에는 염세와 비관이 다른 분류 범주로 인식되었던 것이 전반적으로 비관이라는 항목에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2008년 염세와 비관 항목이 합쳐서 염세비관으로 분류를 통합한 것도 염세와 비관이라는 범주를 더 이상 구분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전체 자살자 중에서 정신이상으로 분류되었던 비율은 1960~70년대에는 3% 내외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08년에는 9.1%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병고로 인한 자살은 1960~70년대까지는 10~15% 정도였다가 1990년~2000년대에는 20~25%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17.8%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병고 자살의 증가는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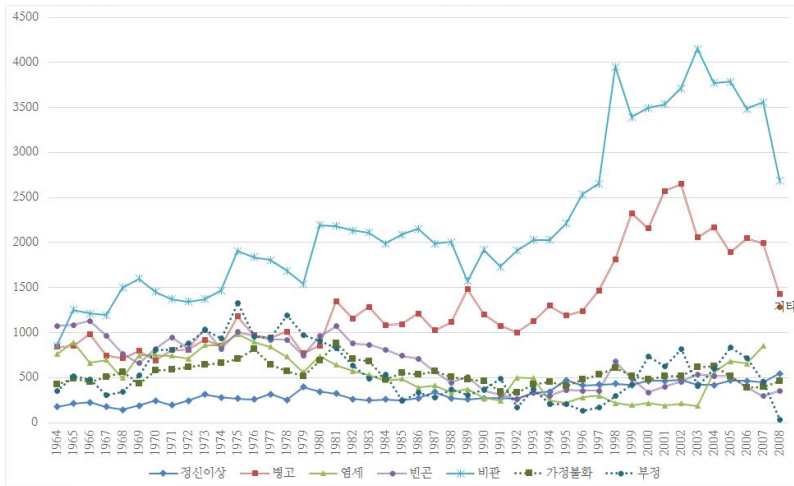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9> 자살원인별 자살자수 시계열 변화 (2009년~2015년)

대~2000년대의 노인 자살의 급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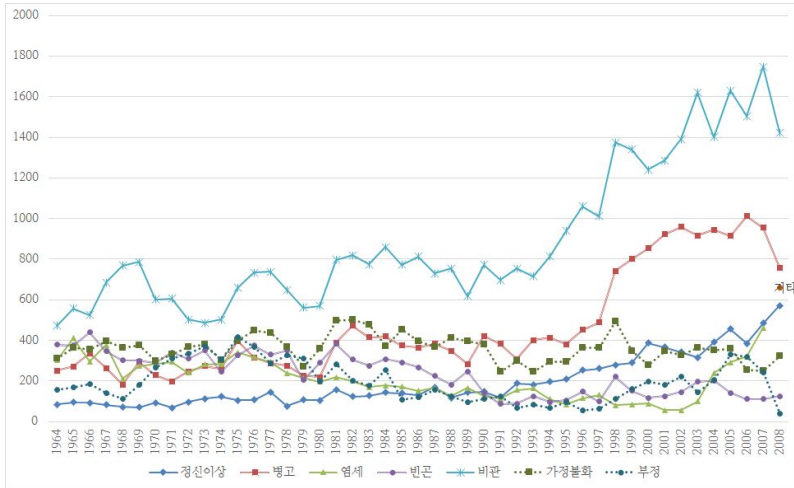
2009년 이후에 새로운 자살원인 분류에 의하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질병문제,” “경제생활문제” 순이었는데, 2013년 이후에는 “경제생활문제”가 “육체적 질병문제” 사유보다 더 많아졌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미상으로 분류된 사례가 천에서 이 천 사례가량으로 많아졌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미상이 2,053건이었다.

자살원인별 남성 자살수의 변화를 보면, 1965년에는 비관(21.1%), 빈곤(18.3%), 염세(15.0%), 병고(14.3%) 순으로 높았다. 자살의 원인을 비관으로 분류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41.4%에 이르렀다. 반면 염세로 분류하는 비율을 계속 낮아져 2000년에는 전체 남성 자살자의 2.6%만 분류되었다. 남성의 자살원인에서는 부정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1975년에는 부정으로 자살하였다는 비율이 16.1%로 비관 다음으로 높은 자살원인으로 나타났다.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10> 주요 자살원인별 남성 자살자수 시계열 변화 (1964년~2008년)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11> 주요 자살원인별 여성 자살자수 시계열 변화 (1964년~2008년)

1965년 여성의 자살원인은 비관(21.3%), 염세(15.7%), 빈곤(14.3%), 가정불화(13.9%), 병고(10.4%)의 순이었다. 비관자살과 병고 자살자수가 199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자살원인의 분류에서 정신이상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60~70년대에는 3~4% 정도였는데,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10%내외로 높아졌고 2008년에는 13.2%나 되었다. 이는 여성이 정신이상으로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단순화하기 보다는 최근의 우울증 담론의 확산 속에서 여성들의 자살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묘사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자살원인에는 가정불화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전체적인 자살률이 감소했던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가정불화에 의한 자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정불화에 의한 자살자수는 다른 자살원인에 비해 일정하고 변화의 폭이 적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

3) 자살수단의 시계열적 변화

1960년대 자살수단의 분류는 絞死(교사), 縊死(액사), 溺死(익사), 刀劍(도검), 總苞(총포), 爆發物(폭발물), 飲毒(음독), 汽車(기차), 自動車(자동차), 瓦斯(와사), 墜落(추락), 投殺(투살), 燒殺(소살), 電氣(전기), 其他(기타)의 열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다.²⁰⁾ 1968년 자살수단의 한문표기가 한글로 고쳐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자어의 음독이 잘못 기재되었는데 이는 이후의 자살수단의 분류의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분류 명칭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했던 용어는 縊死(액사)와 投殺(투살)이다.

‘액사(縊死)’는 1968년과 1969년에는 ‘액사’의 원래말인 ‘의사’로 표현되었고, 1970년에는 ‘액사,’ 1972년에서 1975년까지는 다시 ‘의사,’ 1976년부터 1982년까지는 ‘일사’로 표시되었다. 특히 1978년에 일사라는 용어 밑에 괄호로 “물이 넘쳐 죽음”이라는 문장이 추가되면서 자살수단의 분류에 큰 혼동을 야기했다.²¹⁾ 1983년부터 1985년에는 외사, 1986년부터 2013년까지는 다시 ‘의사’로 기록되었다.²²⁾ 2014년부터 『경찰통

20) 경찰통계연보의 자살수단 분류체계의 특징은 변사자 통계로 묶어서 처리하여 살인사건이나 사고사의 경우와 함께 집계표로 제시되었던 통계 자료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의사(액사)를 분류하였던 것은 타살의 경우 끈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죽게 한 경우와 피해자의 체중으로 목이 졸리게 된 경우를 구별하여 사인을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투살과 추락의 경우도 밀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타살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스스로 떨어져 죽은 사고사나 자살의 경우가 구분되는데, 자살과 타살, 과실사, 재해사를 하나의 통계로 묶어서 집계표를 만들었기에 자살 수단의 분류로는 부적당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분류 과정에서 중복되는 원인으로 집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 이러한 혼동은 분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부연은 자살수단의 분류에서 1975년까지는 교사와 의사를 합쳐서 목매기로 분류하였는데, 1976년부터 1982년까지는 일사라는 항목을 익사와 합쳐서 계산하였다. 특히 1981년과 1982년에는 교사가 숫자가 매우 낮고 일사의 숫자가 큰데, 일사의 수치가 익사로 처리되어 갑자기 목매기는 1980년에 비해 6분의 1로 줄어들고 익사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잘못 분석하였다(김부연, 1997: 62-63). 그는 액사가 익사로 잘못 집계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김부연, 1997: 23). 분류 용어가 잘못되어 일사(액사) 항목을 익사로 묶어서 범주화한 것은 더 큰 분석의 오류를 초래하였다.

계연보』는 교사와 의사로 나누어서 분류하던 항목을 통합하여 ‘목매’으로 변경하였다.²³⁾ 이 논문에서는 교사와 의사(액사, 외사, 일사로 분류되었던 항목 포함)를 합쳐서 목매으로 분류하였다.

투살(投殺)은 1969년에서 1975년까지 ‘몰살’로 잘못 기입되었는데 투(投)자와 몰(沒)자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다시 투살로 기입되었고 1983년 이후 부터는 분류 항목에서 사라졌다. 이 논문에서는 추락(墜落)과 투살(投殺) 항목을 합쳐서 ‘투신’으로 범주화했다.

1983년부터 자살수단에 비행기가 추가되었다. 비행기는 사고사의 분류 상 필요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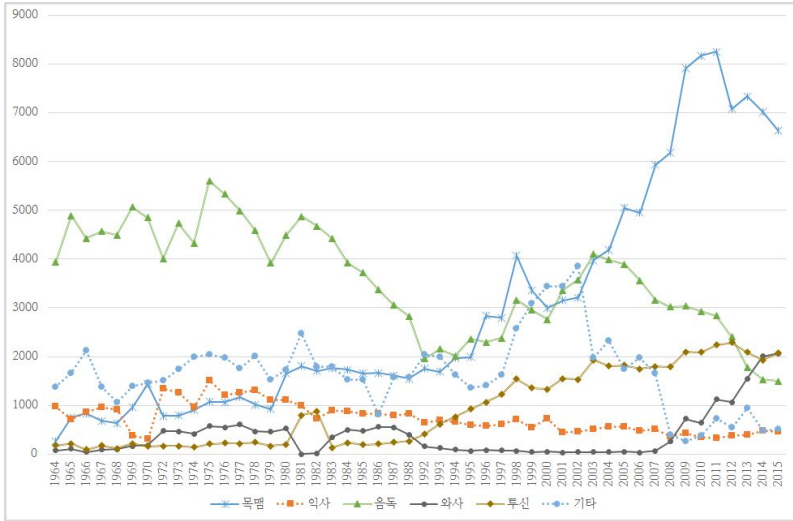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살수단에 따른 자살자수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음독에 의한 자살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월등하게 많아졌다. 1965년에는 전체 자살자의 57.2%가 음독자살을 하였다.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는 1965년에는 전체 자살자의 8.8%에 불과했다. 익사의 경우는 8.4%였다. 음독자살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줄어들었다가 1995

22) 1983년 외사로 바뀌면서 분류기준이 주로 첨가되었다. 1986년도 외사로 정정된 후 교사와 의사의 각주에는 “교사: 끈 또는 띠를 목에 걸고 자기 또는 타인의 손 또는 그와 같은 힘으로 졸라 매서 질식사”로 규정하였고 “의사: 끈 또는 띠를 매고 자기의 체중으로 목을 졸라서 질식사(자살에 한함)”으로 분류 기준을 명시해 두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까지는 ‘의사(액사)’가 ‘교사’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2년부터는 ‘교사’로 기록된 수치가 훨씬 많고 ‘의사(액사)’는 적게 기록되어 이때부터 ‘교사’가 목을 매어 죽은 사람들을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8년에 교사 밑에 괄호에 “목매어 죽음”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교사와 의사(액사)를 구분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물이 넘쳐 죽음”이라는 일사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던 1981년과 1982년에는 일사 항목의 숫자가 많고 교사의 수치가 매우 낮아서 목매어 죽은 사람을 일사로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23) 목매은 ‘목매’의 잘못된 표기이다. ‘목매’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4) 1983년 비행기로 인한 자살이 남성 76명, 여성 52명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집계표 작성 상의 오류로 보인다. 비행기 항목은 거의 자살자가 없어서 자살수단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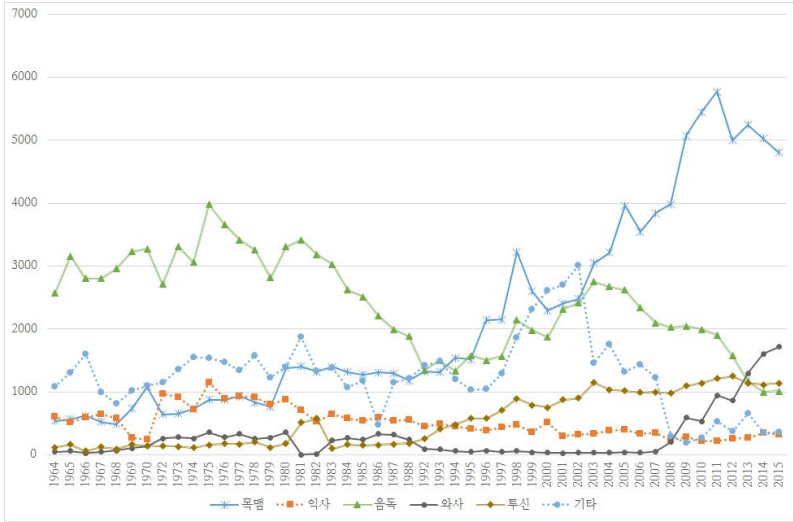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자살수단별 자살자수 시계열 변화 (1964년~2015년)
 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의 자살의 급증의 경향과 관련해서는 다시 목을 매어 죽는 자살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목을 매어 자살한 비율은 1965년 전체의 1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1995년 목을 매 자살한 비율은 전체 자살자의 25.8%였고 2005년에는 39.9%, 2008년에는 50.3%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투신 자살의 경우는 1960~70년대에는 2% 내외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전체 자살자의 11.3%가 투신자살하였고 2008년에는 1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사인 연기에 의한 자살은 1970~80년대 5% 내외로 높았다가 이후 줄어들어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에 1% 미만이다가 2008년 다시 증가하여 2.1%가 되었다.

익사에 의한 자살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높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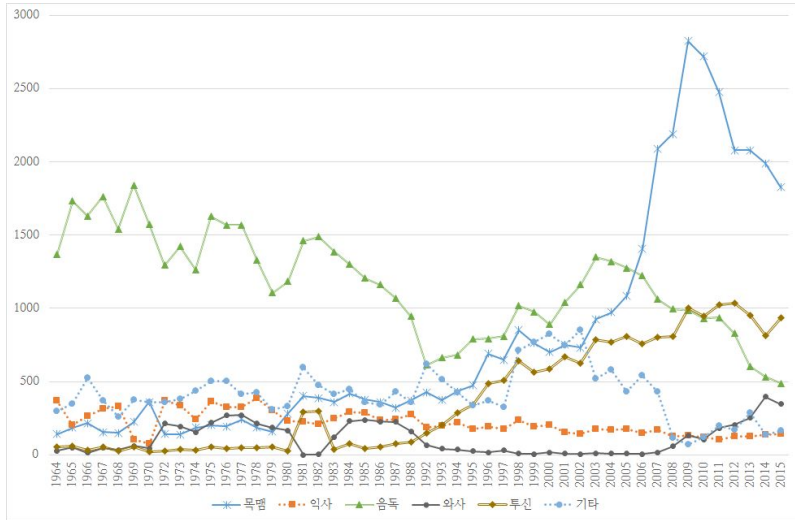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13> 주요 자살수단별 남성 자살자수 시계열 변화 (1964년~2015년)

남성과 여성 모두 1960~70년대에는 음독과 익사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목매으로 인한 자살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투신 자살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가스(연탄가스)로 인한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2000년대 후반 남성과 여성 모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특히 2004년 이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람은 급증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익수 자살이나 음독에 의한 자살자들은 구조되거나 자살기도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1960~70년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의 의약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자살을 쉽게 기도하게 되는 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음독 자살은 한편으로는 그 결과를 운명에 맡기고 삶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돌파구로 시도되는 수난적 자살(ordeal suicide) 경향이 형성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개발시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면, 이웃의 도움이나 '동정금'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14> 주요 자살수단별 여성 자살자수 시계열 변화 (1964년~2015년)를 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음독 자살은 자살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 삶과 자아의 긍정을 위한 계기로 삼는 ‘죽음과의 게임’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Taylor, 1978).

2000년대 들어서면서 목을 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라목손을 비롯한 치명적인 독극물과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성공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경우의 치사율은 69%에 이르며 음독자살(치사율 2%)이나 익수 자살에 비해 치사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Vyrostek et al., 2004; 박상화·임달오, 2013: 51에서 재인용). 목매 자살의 급증은 자살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데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 결론

이 논문은 공식 자살 통계로서의 『경찰통계연보』의 자료의 성격과 중요성을 규명하였고 20세기 자살률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한국 사회 자살률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전망하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 자살 통계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 자살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이 논문의 한계이지만, 보다 심화된 자살 통계 연구는 이러한 기초 분석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통계연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고 2000년대 이후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하여 자살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계열적인 연령별 자살자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1960~70년대는 청년층의 자살이 많았고 최근에는 노인층의 자살이 급증하였다. 4·19 세대 코호트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자살수단과 관련해서는 1960~70년대 음독 자살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목맴으로 인한 자살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살원인에 관한 분류는 자살을 인식하는 문화적 체계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한국사회의 특유의 비관 자살과 염세 자살에 관한 분류 항목은 2008년 염세비관 자살로 통합되었다가 2009년 자살원인 분류 체계를 개편하면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 작성의 국제화와 표준화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살을 이해하는 사회적 의미 변화와도 연관된다.²⁵⁾

25) 자살 원인의 통계적 분류 체계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추이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위기의 영향에 의해 자살률이 민감하게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사회는 자살에 대한 사회구조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는데(정승화, 2012b),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요인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자살률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한국사회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 변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관심에서는 우울증 치료와 같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접근 외에도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과 경제적 불안정의 해소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 가천의과학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8. 『국내 자살원인 실태 조사 및 자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1~2015년 각년판.
- 권세혁·탁종연. 2008. 『경찰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김민영. 2013. “한국 사회의 자살률 분석: 지역사회 단체활동과 문화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7-333.
- 김부연. 1997. “한국인 자살양상의 시계열 경향분석: 경찰청 자살 통계(1964~1995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형수·권이경. 2013.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36-245.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1953~1959년 각년판.
- 노용환. 2004.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우리나라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접근.” 『경제학연구』 54(3): 177-200.
- 박경애. 1996. “성(Gender)과 자살.” 『가족과 문화』 1: 149-171.
- 박상화·임달오. 2013. “우리나라 자살수단에 관한 연구: 2003~2011.” 『대한보건연구』 39(1): 47-55.
- 박종순·이준영·김순덕. 2003.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36(1): 85-91.
- 박종승. 2014. “경찰의 통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통계연보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6(5): 93-118.
- 박형민. 2010. 『자살, 차악의 선택: 자살의 성찰성과 소통 지향성』. 이학사.

- 보건복지부. 2004.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 .
- 송재룡. 2008.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사회이론』 2008 가을/겨울: 123-162.
- 송태민 · 진달래 · 송주영 · 안지영 · 조영하. 2013.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8(1): 122-142.
- 신동준. 2012.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사회 통합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지상주의의 효과.” 『범죄와 비행』 3: 85-103.
- 신승철 · 이호영 · 이은설. 1990. “한국인의 자살(1965-1988).” 『신경정신의학』 29(4): 923-932.
- 심영희. 1986. “한국사회의 자살 :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정신건강연구』 4: 49-71.
- 오진경 · 조영태 · 김창엽. 2005. “2000년 우리나라 성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8: 191-210.
- 유경원 · 노용환. 2007.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살률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18: 59-78.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97-129.
- 이도암. 1965. “한국사회의 집단자살분석.” 『청맥』 2(5): 93-104.
- 이민아 · 강정한. 2014. “한국 사회 자살률의 변동과 원인: 지역단위 지표를 이용한 패널 분석.” 『한국인구학』 37(2): 1-19.
- 이원순. 1990. “한국인의 자살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장현. 1969. “자살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4: 103-115.
- 이지현 · 김소현. 2010. “한국의 자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1983~2003.” 『한국사회학』 44: 63-94.

- 이훈구 · 이혜주. 1998. “한국 실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805-818.
- 임종필. 2006.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사망통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승화. 2012a. “자살과 통치성: 한국사회 자살 담론의 계보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승화. 2012b. “식민지 시기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의 형성: 사회관에 따른 자살론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6: 33-69.
- 지용호 · 조해인. 2014. “한국인의 지난 10년간 자살률 분석, 2003~2012.”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9(1): 132-142.
- 통계청. 2009. 『2009년 사망원인통계결과』 .
- Breed, W. 1963. “Occupational Mobility and Suicide among White Ma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 179-188.
- Douglas, J. D. 1967. *The Social Meanings of Suicid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rkheim, E. 1897. *La Suicide* (임희섭 역. 1994. 『자살론/사회분업론』 . 삼성출판사).
- Gibbs, Jack P. & Walter T. Martin. 1964. *Status Integration and Suicide: A sociological Study*. Eugene, Oregon: University of Oregon Press.
- Palmer, S. 1972. *The Violent Society*. New Haven, Connecticut: Colleague & University Press.
- Taylor, S. 1978. “Suicide and the renewal of life” *Sociological Review* 26: 373-390.
- Taylor, S. 1982. *Durkheim and the Study of Suicide*. London: Macmillan Press.

▣ 부록 ▣

<표 1> 《경찰통계연보》의 자살자수와 성별 자살률(1953년~2015년)

년도	자살자수	남성 자살자수	여성 자살자수	자살률	남성 자살률	여성 자살률
1953	1327	676	651	6.2	6.4	6.0
1954	1431	697	734	6.6	6.5	6.7
1955	2073	1015	1058	9.6	9.4	9.8
1956	2467	1250	1217	11.9	12.4	11.5
1957	3105	1569	1536	14.6	15.0	14.1
1958	-	-	-	-	-	-
1959	3349	1854	1495	14.6	16.4	12.8
1960	5033	2966	2067	20.1	23.6	16.6
1961	6287	3965	2322	24.4	30.6	18.1
1962	-	-	-	-	-	-
1963	5175	-	-	19.0	-	-
1964	7431	5122	2309	26.6	36.4	16.6
1965	8558	5939	2619	29.8	41.1	18.4
1966	8616	5889	2727	29.3	39.7	18.7
1967	8013	5268	2745	26.6	34.6	18.4
1968	7574	5159	2415	24.6	33.1	15.8
1969	8346	5632	2714	26.5	35.3	17.4
1970	8670	6189	2481	26.9	37.9	15.6
1971	8885	6289	2596	27	37.8	16
1972	8522	6054	2468	25.4	35.7	14.9
1973	9417	6830	2587	27.6	39.6	15.3
1974	8960	6610	2350	25.8	37.7	13.7
1975	11243	8231	3012	31.9	46.3	17.2
1976	10597	7536	3061	29.6	41.7	17.2
1977	10236	7305	2931	28.1	39.8	16.2
1978	9870	7215	2655	26.7	38.7	14.5
1979	8331	6165	2166	22.2	32.6	11.6

년도	자살자수	남성 자살자수	여성 자살자수	자살률	남성 자살률	여성 자살률
1980	9911	7650	2261	26	39.8	12
1981	11249	8140	3109	29	41.7	16.2
1982	10043	7117	2926	25.5	35.9	15
1983	9686	6999	2687	24.3	34.8	13.6
1984	9031	6207	2824	22.4	30.5	14.1
1985	8657	6079	2578	21.2	24.7	12.7
1986	8618	6158	2460	20.9	29.6	12
1987	8106	5675	2431	19.5	27.1	11.8
1988	7735	5473	2262	18.4	25.9	10.8
1989	7674	5454	2220	18.1	25.5	10.5
1990	7486	5243	2243	17.5	24.3	10.5
1991	6593	4725	1868	15.2	21.7	8.7
1992	7401	5218	2183	16.9	23.7	10
1993	7608	5531	2077	17.2	24.9	9.5
1994	7451	5306	2145	16.7	23.6	9.7
1995	7709	5455	2254	17.1	24	10.1
1996	8632	5973	2659	19	26.1	11.8
1997	9109	6472	2637	19.8	28	11.6
1998	12458	8911	3547	26.9	38.3	15.4
1999	11713	8341	3372	25.1	35.6	14.6
2000	11794	8448	3346	25.1	35.7	14.3
2001	12277	8847	3430	25.9	37.1	14.6
2002	13055	9436	3619	27.4	39.3	15.3
2003	13005	9134	3871	27.2	37.9	16.3
2004	13293	9385	3908	27.6	38.8	16.4
2005	14011	9611	4400	29.1	39.6	18.4
2006	12968	8820	4148	24.7	36.2	17.2
2007	13407	8790	4617	27.5	35.9	19.1
2008	12270	7931	4339	25.0	32.1	17.8
2009	14722	9487	5221	29.9	38.3	21.3

년도	자살자수	남성 자살자수	여성 자살자수	자살률	남성 자살률	여성 자살률
2010	14779	9787	4988	29.8	39.3	20.2
2011	15681	10728	4951	31.4	42.8	19.9
2012	13940	9451	4485	27.8	37.5	17.9
2013	14271	9920	4346	28.3	39.2	17.3
2014	13658	9614	4043	26.9	37.8	16.0
2015	13436	9496	3934	26.3	37.1	15.5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가) 1954년도 자살률은 1954년도 인구수가 발표되지 않아서 1953년도 인구수로 계산하였다

나) 1959년도 자살통계는 《대한민국통계연감》(7호)에서 인용하였다.

다) 1960년도 자살통계는 경찰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찰통계연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1955년부터 1989년까지 내무부 치안부에 보고된 자살자수를 연구한 이원순의 표에서는 1960년도 자살통계가 기록되어 있어 이를 인용하였다(이원순, 1990: 10).

라) 1963년도는 《경찰통계연보》에 변사자 통계가 그래프만 제시되어 있어 총자살자만 알 수 있다.

마) 1953년에서 1959년까지의 인구수는 《대한민국통계연감에 나와 있는 인구수로 계산하였다.²⁶⁾

바) 1960년 이후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추계인구로 계산하였다.²⁷⁾

26) 1950년대 자살률 계산에 사용된 인구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1950년대 인구수

년도	총인구	남성인구	여성인구	인구정보 출처	기준일
1953	21,546,248	10,642,533	10,903,715	대한민국 통계연감	년말
1954	21,546,248	10,642,533	10,903,715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3년도 인구 사용
1955	21,526,374	10,766,777	10,759,597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5년 9월 1일
1956	20,724,062	10,118,187	10,605,875	대한민국 통계연감	년말
1957	21,321,136	10,458,286	10,862,850	대한민국 통계연감	년말
1959	22,973,992	11,334,429	11,639,363	대한민국 통계연감	년말

27) 2017년 1월 7일 접속하여 확인한 통계청 장래추계인구는 2011년도에 확인했던 2005년 확정인구 기준 인구수로 계산했던 수치와는 총인구수와 달라졌다. 2000년까지는 동일하였지만 2001년 이후 인구수의 보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2001년 이후 자살률은 변경된 새로운 추계인구로 계산한 값이다.

정승화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지식-권력의 재구성”(2016), “한국 근대 가족의 경계와 그림자 모성: ‘식모-침살이’ 여성의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2015), “치유적인 것은 정치적인가: 치유문화에 대한 미국 페미니즘의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2017. 5. 24. 접수; 2017. 6. 21. 수정; 2017. 6. 22. 채택]